

5.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9년 9월 6일
- 발 의 자 : 김대현 의원, 김동식 의원, 김재우 의원, 박갑상 의원  
이영애 의원, 홍인표 의원, 황순자 의원
- 회부일자 : 2019년 9월 9일
- 상정일자 : 제26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2019년 9월 20일) 원안 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대현 의원)

### □ 제안이유

- 2011. 3. 7. 「민법」 개정으로 기존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같은 행위 무능력자 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도가 2013. 7. 1.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주체적인 인격체로서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 개정된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개정 2011.3.7.)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로 포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성년후견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할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성년후견제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창업)

### □ 주요 검토사항

- **안 제3조**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구·군과의 협조를 통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사업 등을 명시하고, 이러한 사업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6조**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검토결과

-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장애인의 법 앞에서 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UN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sup>9)</sup>가 배경이 되고,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시작되었으며,  
 ※ 선진국 성년후견제 도입 : 프랑스(2007년), 스위스(2008년), 독일(2009년) 등
-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16개 단체로 구성된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2004년에 결성되었고, 발달장애인 단체 등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희망하였으며, 2011년 2월에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어 2013. 7.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한 반면,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재산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 하겠음.

### 9) 제 12 조 법 앞의 평등 (2006년 조항 신설)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함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안전장치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가 개인의 권리, 의지 및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익의 충돌 및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비례하고 적합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되고,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또는 사법기관의 정기적인 검토를 받도록 보장한다. 안전장치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한다.
5. 이 조항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이 재산을 소유 또는 상속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다른 형태의 재무신포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장애인의 재산이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또한, 전통적인 후견인 역할을 담당해왔던 가족구성원들이 고령화, 핵가족화 되는 등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발맞추어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으며, 개정된 민법에서도 연고자가 없거나 보호를 요하는(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피성년후견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대구시에서는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비용지원 사업을 통해 후견심판청구 지원과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을 이미 시행 중에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의 시행 근거 마련과 함께 성년후견제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7조에 성년후견제도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실태조사 시 제도의 이용실태나 상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향후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겠으며,
- 치매안심센터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각각의 후견제도 수행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게 되겠으나, 대구시에서 유능하고 우수한 공공후견인 선임과 교육 등을 통해 공공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에 법률 분쟁 등 제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과 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었는데, 타법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모두 빠졌는지?	민법 개정으로 타법에도 이 내용은 모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음.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에 법률 다툼이 생겼을 때, 대처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이 불리한 것은 아닌지?	법원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 중에서 후견인을 신중히 결정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다툼 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됨.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